

2019/10/16

CAPE Global Market Observer

미국 대선후보 이모저모

: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후보

Global Strategist 김윤보

02)6923-7331

younbokim@capecfn.com

03 |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

09 |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 주요 공약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

주요 공약

: 녹색 산업 주도,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
가계 비용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

15 | 워렌 후보 당선 시 예상 변화

1) 국가간 보복 관세 부과 완화, 비관세 장벽 확대 전망

2) 피해 예상 분야

: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IT대형 플랫폼 기업군

3) 수혜 예상 분야

: 친환경 관련 사업(전기차 등), 통신 인프라



글로벌 Strategy

미국 대선후보 이모저모: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후보

Global Strategy 김윤보 · 02)6923-7331 · younbokim@capefn.com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워렌 후보가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대선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 및 주요 공약

저서와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는 '부유층과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붕괴, 환경 오염 등 미국 내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유층과 기업이 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소득과 부를 빼앗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수행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대선 공약 또한 그녀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은 1) 녹색 산업 주도, 2)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3)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 4) 가계 비용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 5)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 워렌 후보는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를 투자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건물/차량/군 시설에서 배출되는 탄소 가스를 제로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탄소 배출 축소를 위해 전기차 생산 인프라 확대, 공공 토지 내 화석 연료 사업 중단 행정명령 발동 또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워렌 후보는 과거 우주 산업과 같이 미국이 녹색 산업을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취약 계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녹색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규제 및 증세와 관련해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업 분할 실시, 클래스-스티걸법 부활, 부유층 및 초대형 기업에 대한 증세를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워렌 후보는 미국 경제 성장에도 중산층이 무너진 것은 기업과 부유층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산업 내 혁신 개선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자리 확대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경제개발국 신설, 정부 R&D 지원 프로젝트 결과물의 미국 내 생산 위무화, 노동자 권익 개선정책(파업권 강화, 임금 인상, 경영활동 참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워렌 후보는 세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자 탄압으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와 공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가계 비용 부담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 메디케어 제도 도입 및 약가 인하, 50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경감, 2년/4년제 대학 무상교육 실시, 사회보장연금 확대, 농촌 인터넷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워렌 후보는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와 학자금으로 인한 빈곤층 확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농촌 피해가 확대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 규제와 관련해 로비 활동에 대한 로비세 부과, 정부 부서 내 기업 영향력 약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워렌 후보는 기업 로비활동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정부 예산과 행정이 기업 이익 창출로 활용된다고 비판합니다.

워렌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변화

워렌 후보는 무역 정책에 있어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선 이후 국가간 보복 관세 부과는 이전 대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대외 교역에 있어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관세 측면에서의 국가간 갈등은 이전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가스 배출 축소, 기업 규제 확대, 약가 인하 등 워렌 후보의 정책을 고려하면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IT 대형 플랫폼 기업군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대로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사업과 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의 경우 녹색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

민주당 대선 후보간
경쟁구도 변화
: 바이든, 샌더스 후보
약세, 워렌 후보 강세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간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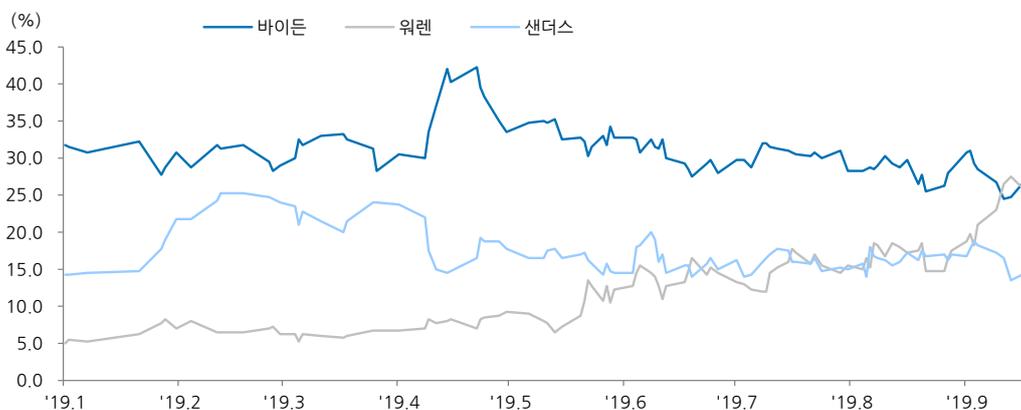
2019년 상반기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는 4월 바이든 후보의 공식 대권 도전 선언으로 더욱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스캔들(성추문, 인종차별 발언 등) 발생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바이든 후보와 그의 아들이 연루되면서 9월 이후 지지율은 30%를 하회하였다.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심장 발작으로 인한 수술 및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으로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지지율은 또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부각된 9월을 기점으로 워렌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반등했다.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후보 지지의 주요 바로미터 중 하나인 선거자금 모금액(3분기 기준)은 샌더스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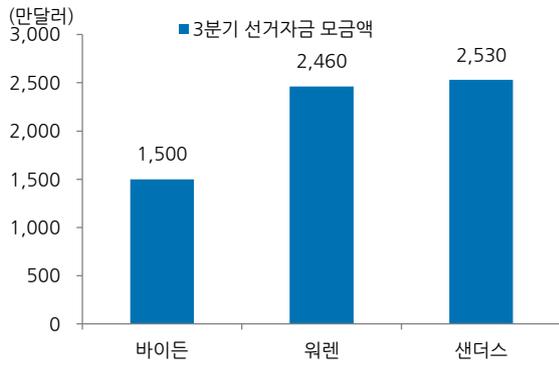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 시 세 민주당 대선후보(바이든, 샌더스, 워렌)가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렌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정치적 스탠스와 대선 정책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1.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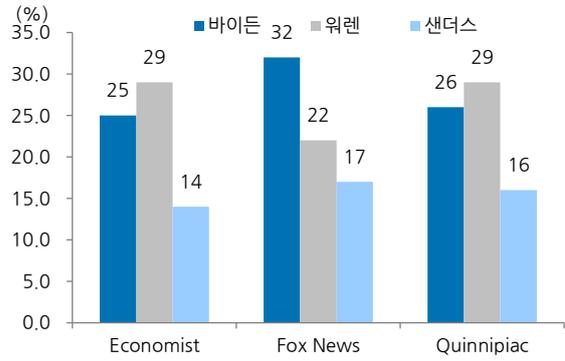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com,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3분기 민주당 대선후보별 선거자금 모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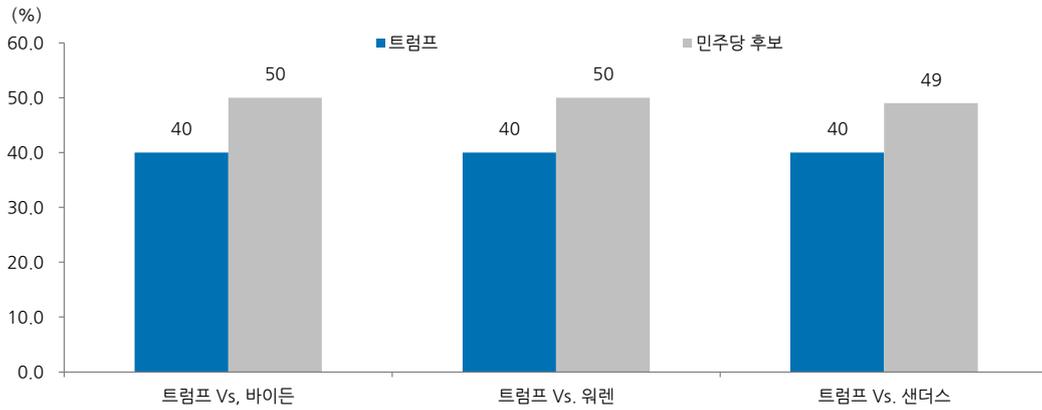
자료: Washington Post,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10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트럼프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시 지지율



자료: Fox News,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10/11일 설문조사 기준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주요 공약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 : 부유층과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부

저서와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워렌 후보의 정치적 목표는 '부유층과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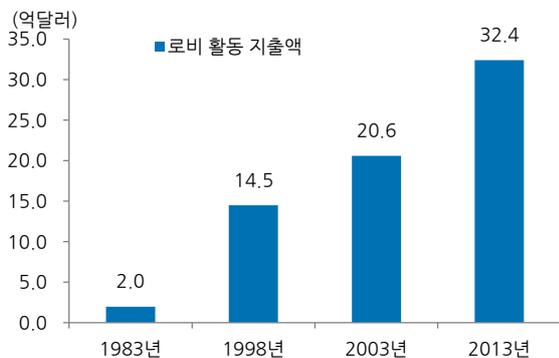
워렌 후보는 본인의 저서('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를 통해 정부가 서민이 아닌 부유층과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붕괴와 환경 오염, 기업 독점 확대 등 주요 문제들의 원인으로 서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부를 지목한다.

기업과 부유층은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가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1983년까지 미국 내 로비 활동의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2013년에는 32억달러를 상회했다.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의 대법원 승률은 1980년대 40%대에서 2010년대 60% 후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정부 내 기업과 부유층의 영향력 확대는 1) 기업 규제 완화와 2)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약화시키고 서민들의 소득과 부를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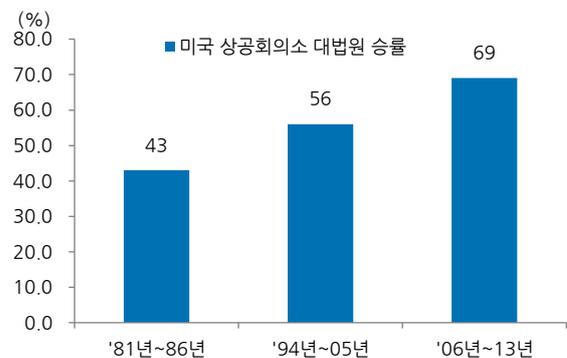
워렌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규제 완화는 시장 독점을 통한 기업 확대, 성과 대비 과도한 인센티브와 배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림5. 로비 활동에 사용된 미국 내 지출 금액



자료: 워렌 후보 저서('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미국 상공회의소의 대법원 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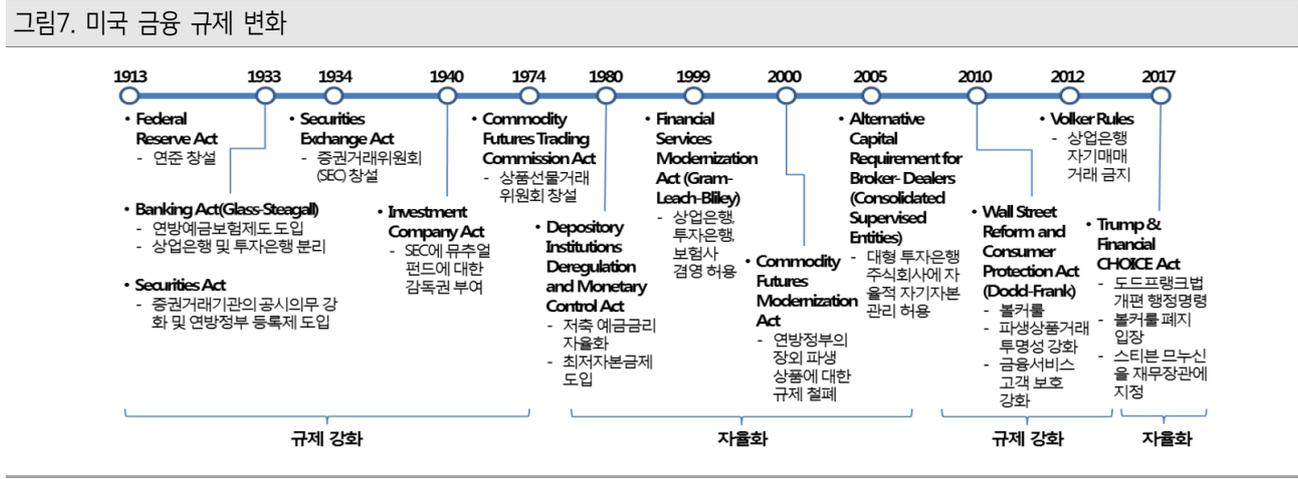


자료: 워렌 후보 저서('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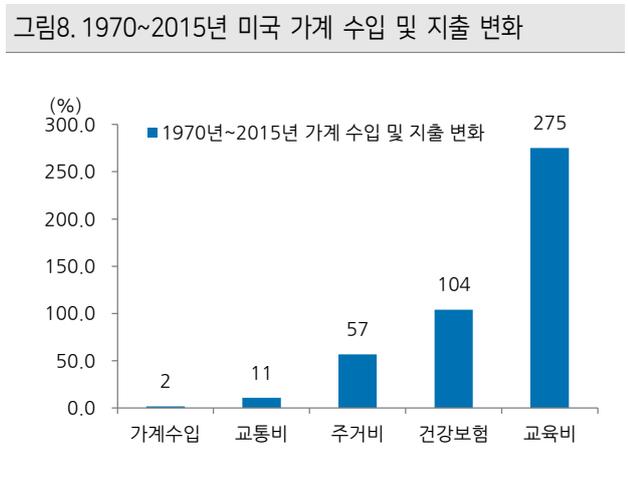
특히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대공황 이후 금융 기업의 투기성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은행 고유 업무와 투자 업무를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을 비롯한 규제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워렌 후보는 1980년대 이후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며 금융 기관들이 고수익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미국 가계소득은 1970년대 이후 정체된 반면,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 이후 소득 상위 10%의 계층은 전체 가계가 창출한 대부분의 부를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은 붕괴했으며 환경 오염 확대로 서민들이 겪는 간접적 피해 또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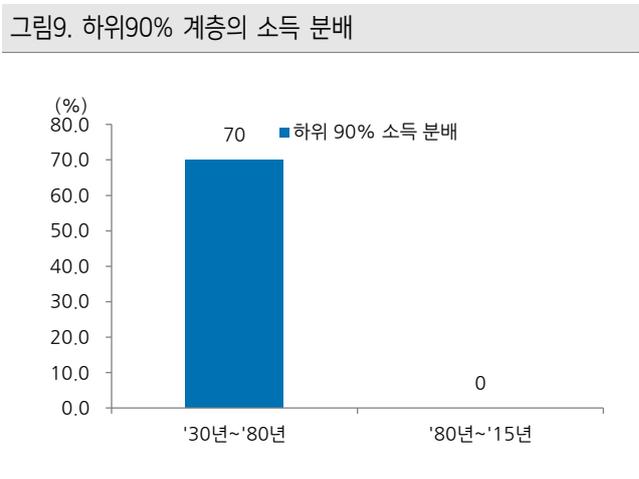
워렌 후보는 미국이 가진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서민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다시금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워렌 후보 저서(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워렌 후보 저서(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워렌 후보의 주요 공약

워렌 후보의 2020년 대선 공약 또한 그녀의 정치적 목표(‘부유층과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부’)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대선 공약을 정리하면 크게

- 1) 녹색 산업 주도
- 2)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 3)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
- 4) 가계 비용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
- 5)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

이렇게 5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워렌 후보는 공약을 통해 워싱턴 내 부패를 척결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분	주요 정책 내용
녹색 산업 주도	- 녹색 사업 관련 투자에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를 투자 : 녹색 아폴로 프로그램(Green Apolo Program), 녹색 산업 활성화(Green Industrial Mobilization), 그린 마셜 플랜(Green Marshall Plan) 정책 수행 - 공공 토지 내 모든 화석 연료 신규 사업 중단 행정명령 서명 - 2028~2035년까지 차량, 건물, 전력 생산 관련 시설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경감 - 2030년까지 비전투 부대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경감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 초대형 기업들에 대한 실질 법인세 도입 - 5,0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 가계에 대한 보유세 부과 - 21세기 버전의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기업분할 실시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	- 경제개발국 신설, 노동자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확대 - 미국 가계를 위한 무역 정책 수립 -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경영 참여활동 확대, 노조 권리 확대
가계 비용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	- 전 국민 대상 메디케어 도입, 처방약 가격 인하 - 학생당 최대 50만달러 학자금 대출 경감, 고등교육 무상 교육을 2년/4년제 대학으로 확대 - 향후 10년간 주택 임대료 10%인하 - 농촌 지역의 필수 서비스 인프라(의료, 인터넷 등) 확대 - 사회보장연금 즉시 확대(1인당 월 80~130달러→200달러)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	- 로비스트 활동 금액에 따라 기업별 로비세(Excessive Lobbying tax) 부과 - 독립적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 정치 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 시행(공무원 이해상충 방지, 로비 활동 제한, 공무원 청렴성 강화) - 국방부 내 기업의 영향력 약화(관련 분야 기업의 취업 제한 등)
그 외 기타 공약	- (대외정책) 국무부 재건을 위한 인력 풀 확충, 군사적 대응 외 수단을 대외 정책에 활용 - (선거제도) 선거인단제도 폐지, 선거 절차 투명성 강화(보안 인프라 강화 및 연방 차원의 기준 확립) - (총기사고) 임기 내 총기사고 사망자 수 20% 수준으로 축소, 연방 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공약1: 녹색 산업 주도

주요 근거
: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확대, 녹색 산업 선점 및 주도 필요

워렌 후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이로 인한 대규모 재산 및 인적 피해를 우려한다. 자연재해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더 큰 피해를 입혀 소득 계층간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공약
: 녹색 사업 관련 향후 10년간 2조 달러 투자, 전기차 시설 및 인프라 확대, 공공 토지 내 화석 연료 사업 중단

최근 기후 변화 대응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워렌 후보는 녹색 산업이 다른 국가들 대비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 개발 산업을 예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이후 녹색 산업 투자에 향후 10년간 총 2조달러를 투자한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공약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향후 녹색 산업에서 미국의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30년대 중반까지 건물과 차량, 군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전기차 생산시설 및 인프라 확대,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 토지 내 화석 연료 사업 중단 행정명령 즉시 서명 등을 목표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다.

표2. 녹색 산업 주도 관련 주요 공약

구분	주요 내용	주요 근거
녹색 제조업 주도 (Leading in Green Manufacturing)	1. 녹색 사업 관련 투자에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를 투자 : 녹색 아폴로 프로그램(0.4조달러)/녹색 산업 활성화(1.5조달러)/그린 마셜 플랜(0.1조달러) 2. 녹색 아폴로 프로그램 수행(Green Apolo Program) : 청정에너지 기술 선도를 위해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 투자 : 국립 청정 에너지 연구소 설립 : 녹색 아폴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술이 상용화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도록 의무화 3. 녹색 산업 활성화(Green Industrial Mobilization) : 향후 10년동안 총 1.5조 달러의 연방 정부 조달 계약을 미국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유해물질 무배출 제품 구매에 사용 4. 그린 마셜 플랜(Green Marshall Plan) : 총 1,000억달러를 미국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 기술의 해외 판매지원에 활용	기후 변화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 향후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 사업 규모는 수십 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과거 우주 경쟁과 같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주도를 통해서 수 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가능
100% 클린에너지 달성 (100% Clean Energy for America)	1. 2028년까지 신규 건축 상업/주거용 건물의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 건축 관련 규정 강화, 기존 건물 개조 장려, 세금 혜택 확대 2. 2030년까지 모든 버스 및 중형 일부 차량의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 전기차 관련 공장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연방 정부 투자 제공, 가스 배출량 제로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 제공 3.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있어 유해물질 배출량 제로 달성 : 연방 재생가능 에너지위원회 설립, 청정 에너지 사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	
공공 토지 보호 (Protecting Our Public Lands)	1. 공공 토지 내 모든 화석 연료 신규 사업 중단 행정명령 서명 2. 공공 토지 내 재생가능 자원을 활용해 전체 전력 생산의 10%를 충당 3. 향후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판매 및 양도를 엄격히 제한	공공 토지 내 석유/가스/석탄 산업 확대로 자연 환경 파괴가 가속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 토지 보호가 필요
군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Our Military Can Help Lead The Fight In Combating Climate Change)	1. 2030년까지 비전투 부대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경감	국방부는 단일 부서 기준으로 미국 내 최대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기관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공약2: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주요 근거
: 규제 완화로 부유층과 기업이 서민의 부를 빼앗음

워렌 후보는 미국 경제 성장에도 중산층이 무너진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 및 부유층이 규제 완화를 통해 서민의 몫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독점 확대는 혁신 둔화와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상승, 금융기업 규제 완화는 레버리지 확대와 금융 비용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요 공약
:글래스-스티겔법 부활, 대형 IT 기업 분할을 통한 경쟁 확대, 기업 및 부유층 세금 확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렌 후보는 기업 독점 방지를 위한 초대형 기업 분할, 금융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해 글래스-스티겔법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기업 분할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제 공약이 이행될 경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분할 이슈와 같이 사업 부문별로 기업분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대형 기업과 부유층은 복잡한 회계 제도를 이용해 세금 부과 대상 이익을 축소하고 서민보다 낮은 실효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워렌 후보는 기업과 부유층이 합당한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실질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고, 빈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기업 규제 확대 및 증세 관련 공약

항목	주요 내용	주요 근거
실질 법인세 도입 (Real Corporate Profits Tax)	1. 초대형 기업들에 대한 실질 법인세 도입 : 1억달러 이상 수익을 기록한 기업은 초과분만큼 7%의 법인세를 의무로 부과 : 실질 법인세는 기존의 세법 시스템을 적용 받지 않는 의무사항으로 적용 : 소득공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대형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차단	기업의 로비 활동과 과거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의 실질 세율은 최근 20여년간 크게 하락
부유층 세금 확대 (Ultra-Millionaire Tax)	1. 5,000만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계에 부유세 부과 (5,000만달러~1억달러: 2%, 1억달러 이상: 3%)	상위 0.1% 부유층이 전체 미국인이 가진 부의 20%를 차지. 소득세 만으로는 현재의 빈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음
월가의 책임 강화 (Holding Wall Street Accountable)	1. 21세기 버전의 글래스-스티겔법 통과 :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 분리 : 강력한 임원 보상규칙 수행, 이유 없는 대량 해고 금지	월가의 지나친 이익 추구 행위 규제를 통해 다가올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
시장 내 경쟁 확대 (Promoting Competitive Markets)	1. 농촌 경제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s Family Farmers) 1) 농업 분야에서의 대기업간 합병을 제한: 기존 반 경쟁 합병안 재검토, 농업 내 수직 계열화 통제 2)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3) 해외 국가들(중국, 사우디 등)의 농촌 토지 구매를 제한 2. 대형 IT 기업 분할(How We Can Break Up Big Tech) 1) 대규모 플랫폼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실시 - 플랫폼 유틸리티(Platform Utility): 글로벌 매출이 250억달러 이상이고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통칭(Google, Facebook, Amazon 등이 포함) -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된 기업은 플랫폼 보유 부문과 플랫폼 사용 부문으로의 기업 분할이 요구됨 - Ex) 페이스북의 경우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분사가 요구되며 기존의 개인 홈페이지 플랫폼 제공 비즈니스만을 수행해야 함 2) 불법적인 기술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기관을 설립	산업별 기업 독점 확대로 거대 기업의 정부 및 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 Google, Amazon과 같은 대형 기업들의 과도한 독점으로 기술 부문의 경쟁 및 혁신이 위축되고 차세대 기술 회사를 압박 독점 금지 확대를 통해 경쟁 확대와 소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공약3: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

주요 근거
: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확대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노동자 권익
약화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와 공유되지 못함

주요 공약
: 경제개발국 신설,
최저임금 상향, 노조
권한 확대, 기업 이사진
내 노동자 비중 확대

워렌 후보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워렌 후보는 경제개발국 신설을 제안한다. 경제개발국은 미국 내 부서별로 흩어진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R&D 프로젝트의 경우, 최종 결과물의 생산은 미국 내에서만 진행되도록 의무화된다.

대외 교역과 관련 업무 또한 경제개발국이 전담한다. 무역 정책 또한 미국 내 일자리 확대 및 보호 등을 위해 주로 시행된다. 수출 증가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환율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워렌 후보는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기업 내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되고,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와 정당히 공유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상향 조정, 기업 경영진 내 노동자 계층의 비중 확대, 노동자 파업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표4.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관련 주요 정책

항목	주요 내용	주요 근거
일자리 확대 및 보호 (Defend & Create American Jobs)	1. 노동자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확대 1) 수출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환율정책 개입 2) 연방정부 R&D 지원 연구 수행 시 표준 조건 확립 : 정부 지원 연구에서 비롯된 제품 생산은 모두 미국 내에서 진행 : R&D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분 확보, 확보된 지분만큼의 투자 수익을 국내 제품 생산/연구개발/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에 재할용 : 일부 해안 지역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에 R&D 투자를 분산 3) 미국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소수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 4)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재구성 : 향후 10년간 건설 프로그램에 200억달러를 투자, 지역 구직시장과 교육시설을 연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2. 경제개발국 신설(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중국 및 독일 등과 같이 첨단 제조업 시장 주도를 위한 투자를 확대 : 정부 내 분산된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독립 부서로 통합 : 신설 경제개발국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 : 향후 대외 무역 관련 프로그램을 일자리 방어 및 창출에 활용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 일자리 유출로 기업 이익 증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낮게 유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은 해외에서의 제품 생산에 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5. 일자리 확대 및 노동자 보호관련 주요 정책(계속)		
항목	주요 내용	주요 근거
무역 정책 접근법 변화 (A New Approach to Trade)	<p>[부유층과 기업이 아닌 서민을 위한 무역 정책을 수행]</p> <p>1. 미국 가계의 이익을 반영한 무역 정책 수립 : 무역 협상 초안 공개 및 대중 의견 수렴, 근로자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무역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들의 승인 이후 무역 합의의 의회 통과 진행</p> <p>2. 대외 교역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 : 노동권 보호, 종교의 자유, 인권 보호,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여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진행</p> <p>3. 산업별 표준 계약 정책</p> <p>1) 제약: 전세계 약가 인하 주도, 글로벌 제약 기업들의 독점적 권한 축소</p> <p>2) 농업: 미국 생산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p> <p>3) 소비자 보호: 미국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을 수입</p>	최근까지의 무역 정책은 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존재. 향후에는 국민의 일자리와 글로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역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노동자 권익 강화 및 임금 인상 (Empowering American Workers and Raising Wages)	<p>1. 근로자 노동권 강화 : 농촌 및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책임 부여를 위한 고용주 기준 확대, 노동조합원 기준 완화, 대학원생 노동조합 찬성, 공공부문 노동자 교섭권 확대 등</p> <p>2. 조직 및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강화 : 근로자 노동 의무의 법제화 금지, 노동자들의 신속한 합의를 위한 노조 서명절차 완화, 고용주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노동자 파업권 강화 등</p> <p>3. 노동자 임금 인상 및 연금 보호 : 노동자 최저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현재 주별로 8~15달러 수준) : 초과근무 수당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행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금 보호</p> <p>4. 노동자의 경영 활동 참여 확대 :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이사회 중 40% 이상을 노동자로 구성 : 비경쟁조항(경쟁 기업 취업 제한) 폐지 : 노동자의 집단 소송 금지 조항 설정 금지</p> <p>5. 노동자 보호 확대 및 차별 철폐</p> <p>6. 노동자를 위한 법적 환경 개선 :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법관을 대법원에 임명</p>	최근 수십년간 기업 기업 이익은 급증했으나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정체 정부를 통한 기업들의 노동 조합 탄압으로 근로자 권익이 크게 약화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공약4: 가계 비용 부담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

주요 근거
: 의료비 및 학자금으로 인한 빈곤층 몰락,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농촌 지역 피해 확대

주요 공약
: 전국민 메디케어 적용, 학생당 최대 50만달러 학자금 대출 경감, 대학 무상교육 지원, 농촌 지역 인터넷 인프라 확충

높은 의료비와 학자금 영향으로 미국 가계의 관련 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워렌 후보는 헬스케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지원이 성실한 시민들의 빈곤층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복귀하기 위해 의료 및 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의료보험) 제도 도입, 2) 학생당 최대 50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 경감 및 2/4년제 대학교육 지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제시한다.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가 신설되고 이를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기타 가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위한 주택 확대, 사회보장연금 확대 또한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워렌 후보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농촌 지역 피해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약한 인프라로 인터넷과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농촌 가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 통신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표6. 가계 비용 부담 완화 및 농촌 투자 확대관련 주요 공약

항목	주요 내용	주요 근거
헬스케어 제도 개선 (Health Care Is A Basic Human Right)	1. 전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제도 도입 :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Medicare for All 도입 2. 처방약 가격 인하 : 가격이 높거나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필요 의약품들에 대해 당국(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직접 생산 확대, 의약품 라이선스 권한 약화	과도한 의료지 제출로 인한 가계 파산 확대. 가계 비용 증가로 중산층 몰락 가속. 미국 가정의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하락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Affordable Higher Education for All)	1. 학생당 최대 50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무상으로 경감 2. 고등교육기관 무상 교육을 2년/4년제 대학으로 확대 3.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Ultra-Millionaire Tax) 부과를 통해 해당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	학자금 부담 확대로 청년 층의 재무구조 악화, 자가 보유비율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주택 구입환경 개선 (Safe and Affordable Housing)	1. 목표: 향후 10년간 주택 임대료를 10% 인하 2. 주요 정책 수단 1) 향후 10년간 저소득 가정 주택 환경 개선에 5,000억달러를 투자, 재원은 상속 세 적용 기준 확대(22백만달러→7백만달러)로 충원 2) 농촌 주택환경 개선에 50억달러 투자 3) 건축 비용을 상승시키는 불필요한 규정을 축소	정부 지원 축소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 수 백만의 가정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지불
농촌 지역 투자 확대 (Investing in Rural America)	1. 농촌 지역의 헬스 케어 접근성 확대 : 농촌 지역 병원간 합병 제한, 250억달러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2. 농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 확대 : 육아 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한 육아 접근성 개선, 농촌 지역에 5.3억달러 규모의 저가 임대주택 보급, 노숙자 및 비표준 주택 보수를 위해 25억달러를 투입 3. 농촌 지역의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 확대 : 지방 자치단체에 자체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권리를 의무화,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권 관리부서 신설 및 850억달러 투입, 망 중립성을 위한 정보통신부서 위원 선임, 민간 네트워크 공급 업체의 경쟁 및 가격 조작 행위 금지 4. 소규모 지역 비즈니스 강화 : 지역 우체국을 통한 기본 은행서비스 제공 확대, 소규모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70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사모 펀드의 소규모 지역 내 기업 인수 제한	농촌 지역 인프라(의료, 인터넷 등) 약화 지속,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피해 확대, 대기업의 경제적 착취 확대, 과도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이탈 가속
사회 복지 강화 (Expanding Social Security)	1. 사회보장 연금을 즉시 확대 : 월 80~130달러 수준의 사회보장 연금을 200달러로 확대 2. 소득 상위 2%의 사회보장 연금 분담금 확대를 통해 재원 마련	임금 정체 및 기본적 생활비용(주택, 의료, 교육 등) 상승으로 미국 가정 경제가 악화 노년층에 대한 빈약한 기존 사회보장정책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공약5: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

주요 근거
: 지나친 로비 활동으로 정부에 대한 기업 및 부유층의 영향력 강화

워렌 후보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기업과 부유층의 지나친 로비 활동에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로비활동으로 정부 예산과 행정이 기업 이익 창출에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 인사가 관련 분야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하고, 다시 정부 요직을 거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요 공약
: 로비세 부과, 공무원 청렴성 강화, 국방부 등 기관 내 기업 영향력 약화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워렌 후보는 1) 일정 규모를 초과한 로비 활동 금액에 대한 로비세 부과, 2) 정치 부패 해소를 위한 공무원 청렴성 강화, 3) 국방부 등 정부 부서 내 기업 영향력 약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부과된 로비세는 로비스트에 구애 받지 않는 독립적 정부 활동을 위한 연구 기관 설립에 사용된다.

표7.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규제 관련 주요 공약

항목	주요 내용	주요 근거
로비세 부과를 통한 로비활동 제한 (Excessive Lobbying Tax)	1. 로비스트 활동 금액에 따라 기업별로 로비세 부과 (50~100만달러: 35% / 100~500만달러: 60% / 500만달러 이상: 75%) 2. 로비스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로비세 활용	지나친 로비 활동으로 거액 기부자 및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됨
로비스트로부터의 의회 독립성 확대 (Strengthening Congressional Independence from Corporate Lobbyists)	1.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기관 설립 : 1970년대까지 존재했던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을 재건하고 현대화. 청문회 준비 등 의정 활동을 지원 : 초과 로비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의회 지원 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 의회 직원들에 대한 경쟁 급여제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의회 내 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 의회의 독립적 의정 활동을 위한 연구 기관 설립이 필요
정치 부패 해소 (End Washington Corruption)	1. 공공 청렴성 복원 1) 공무원의 이해상충 방지 : 대통령 및 부통령 보유 사업 백지신탁, 연방직 후보자의 세금 및 수입 신고 의무화, 고위 공무원의 이해 상충 가능 투자 금지, 공무원의 사무실 내 주식 거래 금지, 내부자 정치 정보 거래 금지 2) 정부와 산업간 연결고리 해제 : 연방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전직 임원들에 대한 기업의 보너스 지급 금지, 전직 로비스트의 정무직 지원 제한, 기업의 전직 공무원 채용 제한 3) 사법부에 대한 윤리적 기준 강화 : 연방 판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 사항 강화, 판사에 대한 중요 정보 공개 요구, 퇴임을 통한 재직 당시의 위법 행위 회피를 금지 2. 로비 활동 제한 1) 로비스트 정의 확대를 통한 기업 로비활동 공개 범위 확대 2) 외국 정부 및 단체의 로비활동 금지 3) 로비 활동에 대한 규칙 강화: 후보자에 대한 기부 및 펀딩 금지 등 3. 연방 기관에 대한 기업 영향력 제한 4. 국민 모두를 위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확대 : 기업-직원 및 소비자간 강제 중재 조항 적용 금지, 집단 소송 등 집단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 폐지, 공정한 탄원 규정 회복 5. 공무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 : 공공 청렴성 부서 신설 및 윤리 위반에 대한 집행 강화, 뇌물 수수 적용 범위 확대 및 현물 기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과거와 달리 정부 활동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함.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의 부패화가 가속화
국방부에 내 기업 영향력 약화 (Reduce Corporate Influence at the Pentagon)	1. 국방부 계약에 참여한 공무원의 관련 분야 기업의 취업을 제한 2. 계약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방부 공무원을 추방 3. 국방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해외 취업을 제한	국방부 내 기업 영향력 확대로 국방 예산이 지나치게 확대, 미국의 국적이 아닌 기업 이익에 국방 예산이 전용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 외 주요 공약

그외 주요 공약
: 국무부 재건 및 군사
외 외교정책 적극 활용,
선거인단제도 폐지 등

그 외 워렌 후보는 공약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권한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 국무부를 재건하고, 군사 행동이 아닌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외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의혹 차단을 위해 선거 진행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공약(보안 인프라 투자 강화 등)을 제시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의 진정한 의사 반영하기 위한 선거인단제도 폐지를 지지한다.

총기 사고와 관련, 현 정부의 강경 대응책(교직원 총기 사용 허가 등)은 부작용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 조건 강화, 연방 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 등 규제를 통한 사전 통제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표8. 기타 주요 공약 내용

구분	관련 이벤트	주요 내용	주요 근거
대외 정책	국무부 재건 (Rebuild the State Department)	1. 외교 서비스 규모 확대 및 소외 국가에 대한 외교 부서 신설 2. 외교 인력 풀 확대 : ROTC와 같은 외교 인력 양성 시설을 대학 내 설치 : 외교 인력 내 인종 및 국가 다양성 확대 : 경력 단계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 신설 3. 외교관 전문화 : 고액 기부자가 아닌 숙련된 외교 경력을 지닌 인력을 해외 대사로 파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 지원 축소. 이로 인해 국무부 내 인적 인프라가 크게 훼손. 외교 역량 회복을 위한 국무부 재건이 필요
	대외 정책 (Foreign Policy)	지나친 국방비 지출 자제, 군사적 대응 외 수단을 대외 정책에 활용	지난 20년간 지나친 국방비 지출로 미국의 국력이 약화.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한 외교 정책 수립이 필요
선거 제도	선거인단제도 폐지 (Get Rid of the Electoral College)	1. 기존 선거인단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제도만을 유지	국민 의사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민주주의의 강화 (Strengthening Our Democracy)	1. 선거 절차 진행 보완 강화 1) 최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2) 선거 보안을 위한 독립적 정부 부서 개설 2. 연방 정부 선거 기준 확립 3. 주 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의 선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제공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 선거 절차가 보안에 매우 취약함, 사이버 공격과 선거 부정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
총기 규제	총기 사고 보호 (Protecting Our Communities from Gun Violence)	1. 목표: 총기 사고 사망자 수를 임기 내 20% 수준까지 축소 2. 주요 정책: 연방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 총기 소유에 필요한 조건 상향(연령 등) 및 구매자 정보 등록	일 평균 100명 총기 사고로 사망. 2017년 기준 한 해 동안 4만명이 총기로 사망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워렌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변화

무역분쟁 이슈
: 국가간 보복 관세는
현재 대비 완화 또는
철회될 전망
: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비관세 측면의
요구사항은 확대될 전망

무역 분쟁: 국가간 보복 관세 완화, 비관세 장벽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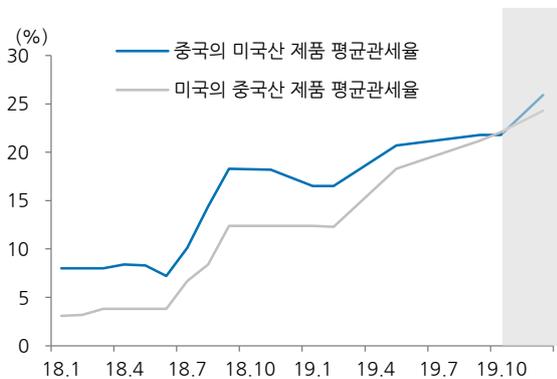
워렌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가간 보복 관세 부과는 완화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워렌 후보는 관세 부과보다는 국가간 협상을 통한 교역 정책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관세 부과 확대에 대한 시장 내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 대비 완화될 것이다.

비관세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워렌 후보는 사회적 책임(환경 보호나 노동권 보호 등) 이행 여부를 대외 교역에 있어 우선 순위로 설정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해외 기업 및 정부와의 교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국 노동자 보호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라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 이슈로 선정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부문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등 국가의 CSR(사회적책임) 지수는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워렌 후보 당선 후 환경오염 등 사회적책임 이행을 다른 국가들에게 교역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압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현재 기술 이전 등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 분야 요구사항 이행에 대해 내정 간섭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협상 스탠스를 고려하면, 비관세 측면에서의 미중 통상 갈등은 이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0. 미중 상호 부과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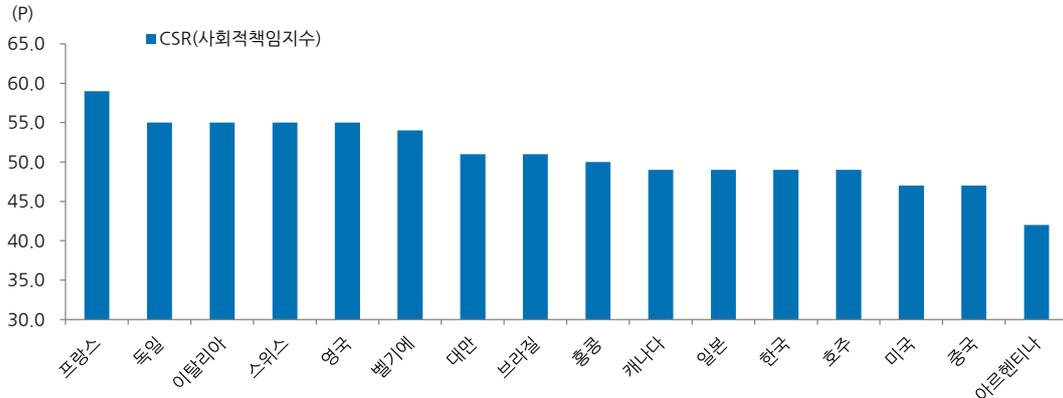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미국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이스라엘, NAFTA,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페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SACU, CAN,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태국 (협상중단) EU	FTAAP (아시아/태평양자유 무역지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케이프투자증권

그림12. 국가별 CSR(사회적책임)지수 비교



자료: CSRHub,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향후 피해 예상 분야: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IT대형 플랫폼 기업군

피해 예상 분야
: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IT 대형 플랫폼 기업군

워렌 후보 당선 시,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 IT 대형 플랫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녹색 산업 관련 공약은 미국 내 에너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워렌 후보는 대통령 당선 직후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국유지 내 신규 원유사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대 중반까지 차량, 건물, 전력 생산 분야의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소비국이자 생산국이다. 실제로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원유 생산 차질 및 원유 수요 감소 영향으로 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업종의 경우 메디케어 도입 및 글래스-스티걸 법 부활 공약이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2016년 기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 가입자 비중은 56%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민 메디케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민간 의료보험 시장 위축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래스-스티걸법 부활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가 분리될 경우, 은행 업계의 수익성 악화 또한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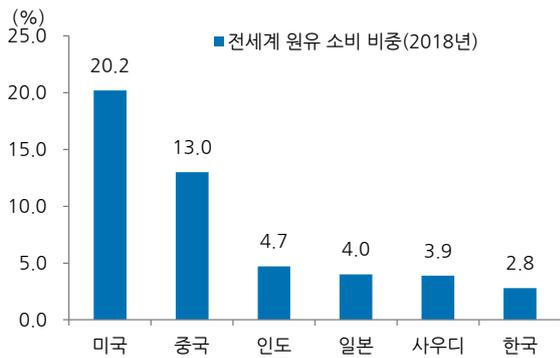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처방약 가격 인하 유도 공약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워렌 후보는 의약품 라이선스 독점 권한 약화, 정부의 일부 의약품 직접 생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 의약품의 수익성은 라이선스 독점 기간 동안 극대화된다. 관련 공약이 실제 이행될 경우 제약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기업 분할 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워렌 후보는 IT 업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 IT 플랫폼 기업 분할을 통해 업종 내 독점구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실제 기업 분사 예시까지 제시하고 있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기업 분할 공약이 실행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기업간 M&A 시장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주요 관련 공약	주요 영향
에너지	- 공공 토지 내 모든 화석 연료 신규 사업 중단 행정명령 서명 - 2028~2035년까지 차량, 건물, 전력 생산 관련 시설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경감,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연방 정부의 투자	셰일오일 등 미국 내 원유 시추 차질 운송 및 유틸리티 부문의 원유 수요 감소
금융	- 21세기 버전의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 학자금 대출 경감, 대학교 무상 교육 도입	메디케어 전면 도입에 따른 보험 비용 확대 투자 금융 부문 규제 확대, 매출 및 수익성 악화 학자금 대출 시장 및 관련 이익 축소
헬스케어	- 전국민 메디케어 도입 - 처방약 가격 인하 유도(일부 의약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직접 생산 확대, 의약품 라이선스 독점 권한 약화, 글로벌 약가 인하정책 주도)	처방약 가격 인하 압력 확대, 라이선스 권한 약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형 IT 플랫폼 기업	- 대형 IT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업분할 실시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 기업 분할 기업 분할에 따른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및 글로벌 시장 지배력 약화 기업간 M&A 시장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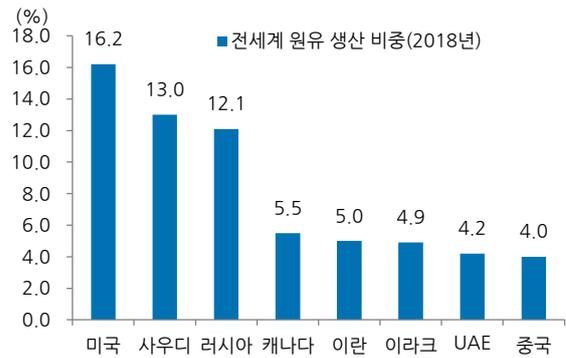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국가별 원유 소비량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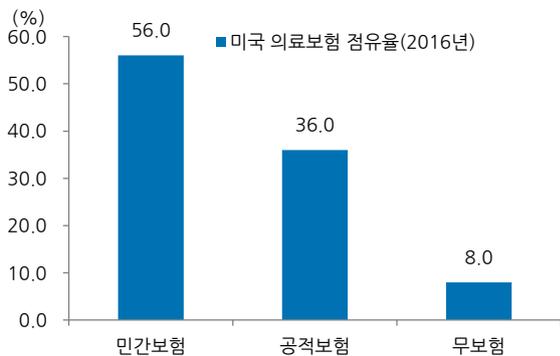
자료: BP,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국가별 원유 생산량 점유율(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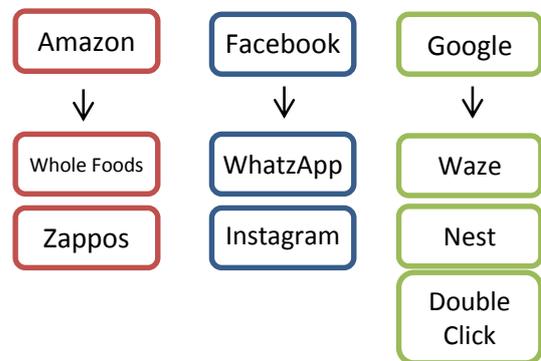
자료: BP,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미국 의료보험 점유율



자료: 보험정책연구원,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대형 IT 플랫폼 기업 분사 예시



자료: 워렌 대선후보 정책 공약 내용 발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향후 수혜 예상 분야: 친환경 관련 사업(전기차 등), 통신 인프라

워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사업과 통신 인프라 분야 사업 분야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미국 내 전체 탄소가스 배출량 중 운송과 전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57%로, 전체 산업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워렌 후보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들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관련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미국 전기차 판매대수는 2010년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보조금 지급 축소 논란을 빚었던 2018년도에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18년 기준 2.1%로 다른 국가들 대비 낮은 수준이다. 워렌 후보 당선 이후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이전 대비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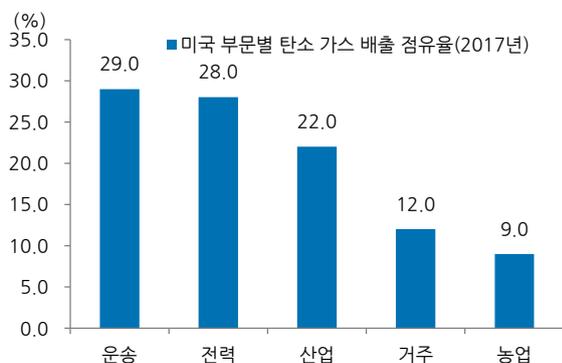
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 또한 수혜가 기대된다. 워렌 후보는 소외 지역의 필수 인프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농촌 지역 내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5G 네트워크는 일부 대도시 단지에 주로 구축되어 있다. 워렌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업종군의 수혜가 기대된다.

표10. 업종별 관련 공약 및 주요 영향

구분	주요 관련 공약	주요 영향
친환경 관련 사업군 (전기차, 등)	- 녹색 사업 관련 투자에 향후 10년간 총 2조 달러를 투자 : 녹색 아폴로 프로그램(Green Apollo Program), 녹색 산업 활성화(Green Industrial Mobilization), 그린 마셜 플랜(Green Marshall Plan) 정책 수행 - 2028~2035년까지 차량, 건물, 전력 생산 관련 시설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경감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통신 인프라	- 농촌 지역의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 확대 : 지방 자치단체에 자체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권리를 의무화,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권 관리부서 신설 및 850억달러 투입, 망 중립성을 위한 정보통신부서 위원 선임, 민간 네트워크 공급 업체의 경쟁 및 가격 조작 행위 금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및 IT 장비 업체 매출 및 투자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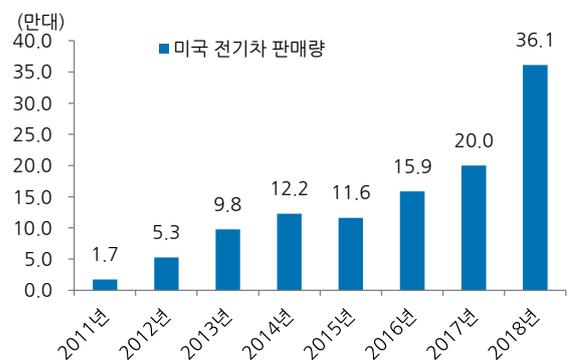
자료: 워렌 대선후보 공식 사이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미국 부문별 가스 배출 점유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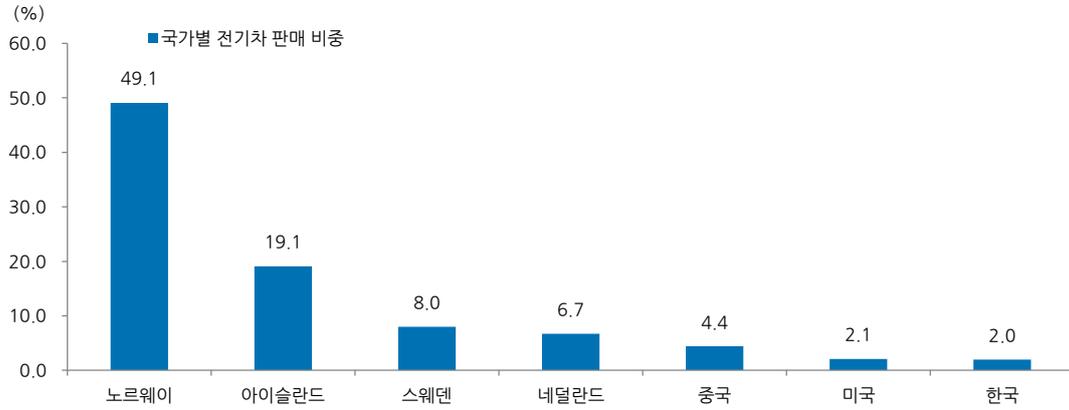
자료: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자료: Inside EV,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국가별 전기차 판매 비중(2018년)



자료: SNE Research,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미국 내 5G 통신 커버리지 지역



자료: Cellularmaps.com,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리서치본부장
 김유겸/이코노미스트
 02)6923-7332
 yukyum@capefn.com

투자전략팀	Analyst	직위	내선번호	E-Mail
투자전략	윤영교	팀장	6923-7352	skyhum00@capefn.com
퀀트	방인성	연구위원	6923-7334	antonio81@capefn.com
시황	한지영	책임연구원	6923-7349	hedge0301@capefn.com
글로벌 투자전략	김윤보	전임연구원	6923-7331	younbokim@capefn.com
RA	김승민	전임연구원	6923-7335	kimsm303@capefn.com
기업분석1팀	Analyst	직위	내선번호	E-Mail
철강/금속/건설(총괄)	김미송	팀장	6923-7336	misongkim@capefn.com
화장품/음식료	김혜미	책임연구원	6923-7337	consumer@capefn.com
은행/보험/증권	김도하	선임연구원	6923-7342	doha.kim@capefn.com
정유/화학	전유진	전임연구원	6923-7354	yujinjin@capefn.com
운송	홍준기	전임연구원	6923-7315	joonkih00@capefn.com
RA	김충현	전임연구원	6923-7314	chunghyun333@capefn.com
RA	김재민	전임연구원	6923-7340	kim4429@capefn.com
기업분석2팀	Analyst	직위	내선번호	E-Mail
스몰캡(총괄)	김인필	팀장	6923-7351	ipkim01@capefn.com
Tech	박성순	연구위원	6923-7333	sspark@capefn.com
지주/엔터/레저/미들캡	심원섭	연구위원	6923-7317	shim47@capefn.com
인터넷/게임	이경일	책임연구원	6923-7321	ki.lee@capefn.com
스몰캡	김광진	전임연구원	6923-7339	kwangjin.kim@capefn.com
RA	박형민	전임연구원	6923-7345	phm@capefn.com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